

설득력이 떨어지는 광상도 전 의원 판결



법으로 세상읽기

이동호 변호사

8일 광상도 전 의원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김만배의 지시를 받은 남욱이 광 씨에게 제공한 50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지만 김만배 씨가 실질 사주였던 성남 대장동 개발회사에 근무했던 광 씨 아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50억 원에 대한 뇌물죄 혐의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실질적으론 전부 무죄나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팔자도 마찬가지로 심정이다. 하지만 법조 일원인 변호사 입장에서 함부로 판결을 편해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았다.

광 전의원과 남욱, 김만배 등이 같이 재판받은 판결인데 분량이 200페이지나 되고 등장인물도 많은데 고유명사들이 전부 알파벳으로 비실명 처리되어 내용을 파악하기가 까다롭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대강의 윤곽을 파악할 수는 있다.

우선 판결은 광 씨 아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았다. 50억 원 성과급 지급을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질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쉽게 낫는 가벼운 병명에 관한 진단서만 있는 데도 형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50억 원의 액수를 정한 것도 절차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판결문에 나온 임직원들의 성과급 표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성과급 액수가 대표이사는 무려 120억 원이고 그 밑에 임원들도 50억, 30억, 15억 원 등 엄청난 금액이다. 부장 이하 6명 일반 직원들의 연봉은 고작 4000~6000만 원대에 불과했지만 성과급은 일률적으로 5억 원이나 되었다. 이 정도 성과급이면 적은 연봉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데도 유독 광 씨의 아들에 대해서만 사후에 5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던 것이다. 근무 중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이지만 말단 대리에게 대표이사 바로 밑의 전무와 동일하게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액의 성과급 지급과 당시 국회의원이던 광 씨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성도 인정

됐다. 광 씨 아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무렵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졌다. 그래서 국회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광 씨도 위원에 포함됐던 것이다. 김만배로서는 이 특위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광 씨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광 씨의 아들이 받은 돈을 광 씨가 직접 받은 뇌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한데 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이유는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듯이 아들이 독립 생계를 유지했고 돈이 광 씨에게 흘러간 정황도 없었다는 점이다.

두 허언이었다는 것이다. 김만배라는 사람을 바로 취급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물론 판결문은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9페이지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기는 하다. 광 씨가 수원지검 사건에 도움 줬다는 이유만으로 50억 원을 준다든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고문계약 기간이 김만배가 50억 클럽을 언급하기 시작한 때보다 앞선 시기이고 머니투데이 회장 자녀들에게 지급했던 49억 원도 반환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신빙성 있게 볼 사정도 많다. 광 씨의 아들에게 김만배가 말했던 50억 원이 정확하게 지급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머니투데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광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스

50억 클럽 발언 신빙성 낮다는 이유로 무죄는 납득 어려워 2심 판결도 설득력 없으면 법조계 향한 국민 분노 커질 것

그러나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광 씨 아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 몇 달 동안 광 씨와 아들 간 통화량이 급증했었다. 돈의 뒤처리를 논의했을 수도 있다. 김만배가 그로부터 광 씨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고 광 씨 아들에게도 돈을 한번에 주지 말고 서너 차례 나눠서 다른 사람 통해 주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광 씨 아들이 성과급이 50억 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듣고도 놀라지 않아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래서 판결문도 이 돈이 뇌물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쓰여 있다.

그럼에도 판결은 이 돈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김만배가 그동안 떠들고 다녔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발언은 모

회장측이 돈을 반환한 시점도 대장동 사건이 터질 무렵과 근접했기 때문이다.

즉 광 씨 아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50억 원 성과급이 지급됐고 이 금액이 김만배가 평소 말한 금액과 일치하고, 국회의원이던 광 씨의 직무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련성, 대가성이 다 인정되는데도 김만배의 50억 클럽 발언을 헛소리 취급하고 아들의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뇌물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무조건 유죄로 뒤집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조계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스카이&팜

요즘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 비행기를 타거나 KTX나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경비에 3분의 1을, 숙박비에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음식값으로 지불한다. 즉, 이동하고 먹고 자는 데 대부분의 경비를 사용한다. 그러나 '움직이면 돈' '집 나서면 돈'이라는 말이 전리처럼 떠돈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여행이 있다. 돈을 한 푼도 갖지 않고 길을 떠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여행이 있다. 간단한 입을 거리만 배낭에 달랑 매고 떠나는 '무전여행(無錢旅行)'을 말한다. 물론 원래의 무전여행은 정말 한 푼 없이 하는 여행은 아니다. 여행지에서 일용직으로 여행비를 벌며 충당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여행을 의미한다.

때로는 완전히 땀 한 푼 없이 떠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돈과 음식물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1980~90년대에 한창 유

무전여행



행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요즘도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고생을 사서라도 하고 싶은 젊은이 중에 무전여행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

대학의 한 종교 동아리는 '거지전도'라는 이름으로 '수원에서 서울까지' 등 무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주머니에 집으로 돌아갈 차비만 달랑 넣고 4박5박 동안 가정을 방문하거나 길가에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코스다. 정 먹고 잘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심 좋은 가정에서 숙박을 해결한다.

무전여행의 묘미는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나는 것이다. 여행을 하다 마음 내키는 곳이 있으면 시간에 미치지 않고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게 강점이다. 시골마을에서 일손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낯선 이와 길동무가 되기도 한다. 때론 반찬이 채소뿐인 절밥을 얻어먹고 '관세음보살'을, 같은 날 교회나 성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아멘"을 외쳐보기도 한다.

무전여행 중 공짜로 자동차를 얻어 타는 일을 서양에서는 '히치하이킹(hitchhiking)'이라고 한다. 협정 체결 국가에 최장 1년 단위로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여객 공부도 하며 여행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있다. 18세부터 30세까지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대만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23개국과 협정이 체결돼 있다. 조경진편집인

社說

한반도 핵 위기는 민주당 친북노선이 빚은 참극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에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방사포가 한국 내 한·미 공군기지를 겨냥했음을 시사했다. 북의 대남 핵공격 공언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문재인정부 임기 5년 내내의 주장과 행동의 여파로 한반도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좌파는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라고 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노골적으로 우리를 '핵 협박'하고 있다.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을 노리는 ICBM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한국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 수준까지 개발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군의 한국 지원을 막고 유엔 제재를 풀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실제 군사적으로 핵을 사용할 상대는 한국뿐이다.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경우 즉시 멸망한다는 것을 북한 자신 너무도 잘 알고 때문이다.

북한은 ICBM 화성-15형을 쏜 지 이틀 만인 20일 평안남도 속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600mm 방사포탄 2발의 가상 표적은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337km와 395km 사거리에 설정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그 가상 표적 부근에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가 있다.

19일 한미가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한 연합 비행을 위해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가 각각 출격한 곳이다. 전술핵으로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이 방사포 세례만 퍼부어도 한미 최신에 전투기들은 떠보지도 못하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미는 북한 방사포에 대한 뚜렷한 요격 수단이 없다.

북한은 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초대형 방사포 등 '신종

무기 4종 세트'로 불리는 전술핵무기 실험을 시작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했고, 김여정은 2022년 4월 전술핵을 거론하며 "남조선 전멸"을 협박했다. 그 직후 북은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런데도 문 정부를 포함 역대 민주당 정부는 북핵 실상을 외면했다. "북한 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용이나 대미 협상용"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개발 초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며 대북 지원을 계속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미국에서 "자유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중단했고, '대화'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북한 핵이 한국을 인질로 잡으려는 것이라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거나 대화만 하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북한 핵·미사일은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남북 모두의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에 핵을 쓰겠느냐"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북에게 매년 쌀과 비료 수십만톤을 퍼주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달러도 공급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급처럼 정부가 강경 대응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최악인 민생 경제가 심각할 수령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단 한 번 변성한 적이 없다. 북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탓해왔다. 이제는 북한 핵 미사일을 변호하고 방치한 민주당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위기가 닥아 닌 대한민국 소속 정당의 손에 의해 또다시 초래되는 건 죽어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총선 유불리' 대상 아니다

직업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국민연금을 수령 가능케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률안심사소위(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수정안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타 연금 수령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추가 논의를 위해 2소위로 회부돼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연금은 어느 직업에서 근무했든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서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고, 최대 기금인 국민연금까지 기금 고갈이 전망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성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를 유지하거나 50%로 상향하는 안 등에 대해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는 15%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물가도 폭등했는데, 보험료마저 너무 올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더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금특위는 모수(parameter)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의무가입·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등을 뺀 채 논의된 내용만을 종합해 다음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숫자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칫 연금 개혁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사고 있다.

연금특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빼고 '보고' 국회가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 정부, 국회·국민 이해 속 연금 개혁 단행해야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마다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2041년 1778조 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께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해 보험료율을 겨우 그해 연금을 주려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4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미래 세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데도 현재 가입자(보험료율 9%)보다 4배가량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인데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꼬여가고 있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알맹이 없는 권고안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이를 기화로 정치권에

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조

단행하길 당부한다.